

#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철원의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통일연구원)

## I. DMZ 접경지역 신남북산업단지의 필요성

###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신남북산업단지조성 필요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시작될 때 효과가 클 것이다. 현재 북한에게 경제협력이 가장 절실하며 또한 우리의 경우에도 경제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해가면서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요구된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인력이 복합된 남북경협체의 시작으로 그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되었던 개성공단의 경험은 새로운 형태의 경협모델을 요청하고 있으며, ‘퍼주기 지원’이란 비난을 극복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원칙을 지키는 새로운 남북경협은 남북한의 상생은 물론, 개성공단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여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남북산업단지는 DMZ 접경지역, 특히 남쪽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DMZ를 개방하여 비무장화, 평화지대화 하는 효과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중무장지대인 DMZ 접경지역을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시대에 통일준비란 국가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경제활동과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남북한 협력의 장으로 DMZ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현재 소외되고 낙후된 DMZ 접경지역을 평화와 신산업 개발거점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도 DMZ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남북산업단지의 조성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양자는 맞물려 추진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2.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본 신남북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개성공단의 폐쇄 경험은 개성공단<sup>1)</sup>이 가지는 어려움과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 만큼,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협력, 특히 경제협력이 재개·활성화 되더라도 개성공단의 확대만을 추구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롭게 조성될 신남북산업단지 전략의 핵심은 우리가 통제 및 관할이 가능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DMZ 접경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제협업을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남북산업단지의 중심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DMZ를 거쳐 남·북측 접경지역을 아우르는 ‘호리병’형태의 ‘남주북종’(南主北從)형의, DMZ를 넘어 남북한의 인력과 물자가 어울리고 오르내리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북산업단지에서는 북한의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우리가 적극 활용하여 남북 간 연계협력을 지속 심화시키면서 우리의 국가성장과 통일준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 3. 남북산업단지의 의미와 효과에서 본 신남북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남북산업단지 조성은 경제적 이익, 평화적 가치 제고, 남북관계 개선 등 복합적 의미를 가진다. 먼저, 남북산업단지는 남북한이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지하자원·토지와 연계되어 ‘Win-Win Zone’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둘째, 남북산업단지는 DMZ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부분적이나마 정치·군사적 갈등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산업단지는 ‘Peace Zone’

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남북산업단지 조성으로 남북한 주민이 남·북쪽으로 왕래함으로써 산업단지는 남북한 주민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동질성 회복의 장으로 활용되는 ‘Relation Zone’이라 할 수 있다. 즉 산업단지 조성은 남북한이 가장 원하는 협력 형태일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심해지는 경쟁관계에서 남북한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

## II. 북한 지하자원 활용 신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 1. 북한 지하자원의 활용에서 본 신남북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북한에는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원료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북한 지하자원(주요 17개 광종)의 잠재가치는 남한의 지하자원 잠재가치 보다 약 24배 많다고 평가된다. 반면 남한은 산업규모의 성장으로 인한 물량증가와 더불어 국제 광물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해 매년 수입액이 증가되고 있고, 지하자원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다. 특히 금, 금속광의 경우 광물가격 상승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아져 자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한의 광물자원 수입액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북한은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광산에 대한 시설투자 부족과 기술낙후 등으로 생산량은 많지 않으며, 2000년 이후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북한에 부존하고 있으며 개발 경쟁력이 있는 10대 광물종 가운데 남한 내수의 1/4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10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철의 경우 우리 내수의 1/4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250년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1) 개성공단은 폐쇄적인 공업단지 운영으로 인하여 자율적인 기업활동과 성장이 제한받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투자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생산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으로 됨에 따라 생산물의 해외 수출에서 높은 관세를 지불하여야 함으로 생산품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현재 중국과 EU를 비롯한 외국기업은 경쟁적으로 북한자원에 대한 확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외국 유명기업의 원료 조달 하청기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 남한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북한의 지하자원을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대외경협이 막혀있는 상황을 악용하여 북한의 자원을 헐값에 매입하여 중국에 반입한 뒤, 이를 제품화하여 다시 북한에 고가에 되팔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자원 관련 남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남한은 산업 원료에 필요한 원료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 2. 북한의 4중 이익과 신남북산업단지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신남북산업단지의 구상은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함은 물론, 4중적 측면에서 북한에게 이익이 되어 호응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첫째, 우리가 북한의 자원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북한에게 ‘1차적 이득’을 줄 수 있다. 둘째, 신남북산업단지에 반입된 북한의 자원을 남북인력이 함께 보다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인력노동의 제공을 통해 ‘2차적 이득’을 얻는다. 셋째, 신남북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된 제품 가운데 북한이 필요한 생산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은 ‘3차적 이득’을 얻는다. 넷째, 신남북산업단지 내에서 진행될 북한 지하자원의 가공과정, 기타 에너지, 환경,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남북한의 과학기술인력이 교류하여 북한의 전문인력이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능력을 배양할 경우 북한은 ‘4차적 이득’을 획득한다.

물론 우리의 경우,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 국가성장에 필수적인 지하자원의 안정적 확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 이용, 남북 과학기술전문가 교류협력 및 북한인력의 능력배양을 통해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필요성 환기 등 유·무형의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자원은 남북한에게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성장을 위해서, 북한을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편입하려는 남북한 산업재배치를 위해서, 남북 간 인적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신남북경협, 신남북산업단지 조성은 국가전략적으로 요청되는 과제이다.

지하자원에 대한 남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은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남한은 산업 원료에 필요한 원료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대하는 상호협력에 실질히 요청된다.

이처럼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남북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남북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신남북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물류체계 확보, 사업의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북한 지하자원 관련 사업은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III.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철원 신남북산업단지 조성 방안

### 1. 철원 신남북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신남북산업단지의 입지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산업단지이므로 북한 광산으로부터 광물조달의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토지이용의 제한이 적고, 전력 확보가 용이해야 한다. 셋째, 생산물의 국내 수요지역 운송과 수출에 편리한 항구 인접지역 혹은 항구이송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넷째, DMZ에 인접한 지역으로 국토균형개발과 통일시대의 핵심 산업단지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본요소와 대상지역들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철원지역이 산업단지 조성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 지역으로부터 물류 수송에 가장 용이하고, 특히 남한 산업의 수요자인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산업단지의 성격에서 북한자원의 수송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점은 산업단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또한 생산제품의 판매 역시 산업단지의 지속적 운영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 자원 수송이 용이하고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는 철원이 가장 적합지라 볼 수 있다. 즉 철원은 북한으로부터의 물류수송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남쪽의 수도권과 북쪽의 원산, 함흥 등 대도시권을 연결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와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철원은 남북한, 나아가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의 주요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다.

둘째, 북한 지하자원은 북한 전역에 분포하고 있어서, 부피가 큰(물동량이 많은) 지하자원을 남한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철도 운송비 절감이 중요하다. 경원선은 철원 신탄리에서 휴전선을 거쳐 평강으로 이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다. 철도뿐 아니라 철원은 국도로도 남북을 연결하고 있다. 남북교통망 제3축(철원-서울-충무)과 제5축(철원-춘천-김해), 동서 교통망 제3축의 교차지역으로, 남북교통망은 국도 6개 노선 중 3번 국도가 신탄리에서 월정리를 거쳐 평강으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셋째, 또한 철원지역은 경원선 연결의 기착지로서 경원선을 통해 북한주민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철도 운송을 통해 단시간에 많은 인원의 이동이 가능하여 물류 운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DMZ 접경지역에 설치되는 철원지역 신남북산

업단지 지역은 광활한 평야와 구릉지가 발달해 산업단지 용지 확보 여건이 매우 용이하며, 다른 지역보다 토지비가 저렴하여 공단분양 원가가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다섯째, 지하자원 산업단지는 산업특성상 전력과 용수 사용이 많기 때문에 용수 및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 철원지역은 한탄강 및 한강수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력 공급도 주변지역으로부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지하자원 활용 신남북산업단지 조성은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반도 중심지대인 철원지역은 국토의 중추교통망인 경원선과 국도 3호선이 단절되어 있어 남북교류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철원지역은 우선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여건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이 공동의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므로 입지 확보에 있어서 군사안보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부 철원지역은 여전히 남북의 대규모부대가 대치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 철원지역에 우선적으로 평화산업단지 조성과는 같은 남북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노동력과 광물자원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합쳐져서 남북이 서로 ‘Win-Win’ 하는 새로운 형태의 남북협력사업은 한반도 중앙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2. 철원 신남북산업단지 대상산업

대상산업을 선정하기 위한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다양한 지하자원 중에서 북한으로부터 원료조달이 용이하고, 남한의 수요가 많거나 또는 적은 양일지라도 수입의존율이 높아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광물이다. 둘째, 남한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참여가 용이하며, 북한 인력 고용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이다. 셋째, 주산업단지가 남북한 접경지역의 남한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건설 및 공간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원부자재 등이 전락물자 반출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업 생산이 용이하여야 한다. 넷째, 접경지역은 향후 관광 및 생태보존 지역으로 발전해야 하므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이 환경오염 배출이 적고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산업이어야 한다. 다섯째, 남한의 지하자원 수요가 많아 지하자원 수입규모가 큰 산업일지라도 기존 남한 생산시설에 의해 산업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대규모 생산시설(예: 제철소)은 사업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기 선정기준을 감안한 철원 신남북산업단지 내 대상산업으로 비료산업, 내화물산업, 중탄(탄산칼슘) 제조

산업, 희유 및 희토류 가공 산업, 마그네슘 제련산업, 석가공 산업 등 6개 산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상기 대상산업 유치의 전제는 북한의 지하자원 에 대한 선광과 제련시설을 철원 신남북산업단지 내에 설비한다는 것이다. 생태계가 잘 보전된 철원지역에서 신남북산업단지가 환경친화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은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이유로 북한의 광산에 선광과 제련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경우, 철원 신남북 산업단지는 단순히 북한에서 생산된 금속(폴리브덴을 예로 들면 북한 광산에서 광석을 채광하고, 1차 농축(선광)과 2차 농축(제련)을 하여 제련이 완료된 폴리브덴 산화물 형태 혹은 금속)을 철원산업단지로 운반하여 유회 제 등을 생산하는 후방산업의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이들 시설들은 이미 남한 내 산업지역에 존재하고 있어 철

### 철원 신남북산업단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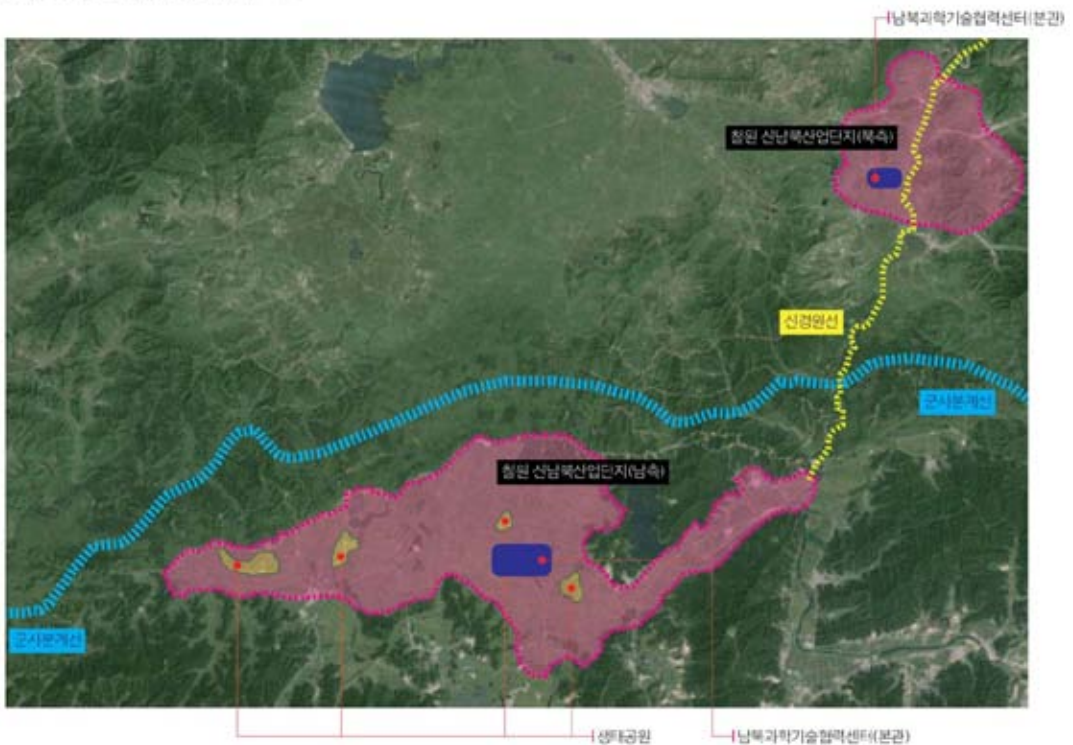


그림 1. 「철원 신남북산업단지」,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위치 및 구성도

원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고, 아울러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부피가 큰 지하자원을 1차 농축하는 시설까지 설치하고, 부피를 줄인 선광산물을 철원산업단지로 운반하여 제련(혹은 가공)하는 시설을 친환경 공법을 도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제련(가공)산업은 철원에 유치되어야 한다. 다만 울산 산업단지에 있는 제련산업이 주변 지역에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설을 갖추고 친환경 조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철원 신남북산업단지도 환경피해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3. 철원 신남북산업단지 내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

남북이 맞대고 있는 DMZ 접경지역에 새롭게 조성될 철원 신남북산업단지 내에 「(가칭)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계획 수립,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과제 선정, 정보교환,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및 교육 등 실질적인 남북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를 DMZ접경지역에 단독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남북 접경지역에 신남북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산업단지 내에 과학기술 협력센터를 두는 것이 산업단지의 성공과 지속성,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신남북산업단지 내에 위치할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도 산업단지와 같이 ‘남주북중’형으로 하여 남북인력이 DMZ를 통하여 왕래하도록 한다. 다만 신남북산업단지와 같이 주요 남북과학기술협력은 남측 철원접경지역에 위치할 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를 통해 지하자원관련 협력을 중심으로 하되, 그 외 남북이 공히 관심을 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식량, 환경, 에너지, 생명공학, 의료 등의 분야

에서도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남북한이 서로 연구 인력을 배치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인력도 개발한다.

## IV. 법적 준비

### 1. 「철원 신남북산업단지법」

철원 신남북산업단지는 DMZ 이남과 DMZ이북 지역에 산업시설 및 기숙시설이 결합된 것이므로, 이 산업단지에 어떠한 법제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단일한 법제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 단지 내 DMZ의 각 이북과 이남에 별개의 법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북과 이남에 각 산업시설과 기숙시설이 나뉘게 된 것은 철원 신남북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정치, 군사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므로, 철원 신남북산업단지에 단일한 법제를 적용하여 동 단지가 남북경제교류와 경제통합의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 법제통합의 시금석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철원 신남북산업단지에 하나의 기본법을 적용한다고 할 때, 「(가칭)철원 신남북산업단지법」을 북한의 입법기관과 남한의 입법기관이 동시에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남북한 각각이 입법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법령에 들어가는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인 수준의 내용에 그쳐야 할 것이다. 「철원 신남북산업단지법」은 북한의 헌법, 법령에도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동시에 남한의 헌법, 법령에도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북한은 우리 측의 의견이 상당히 포함된 「개성공단지구법」을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고, 사실 이 법에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내용을 이미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개성공업지구법」 수준의 내용이 「철원 신남북산업단지법」에 포함되는 것은 현행 북한 법령상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철원 신남북산업단지 내에서 남한 투자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서는 숙인주의 원칙에 따라 남한의 법령에 따라 남한의 법원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동 단지 내에서 북한 투자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서는 동일한 원칙에 의해 북한의 법령에 따라 북한의 법원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의 투자자와 철원 신남북산업단지의 행정당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또는 북한의 투자자와 철원 신남북산업단지의 행정당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동 단지가 경제특구이고 동 단지를 관할하는 행정당국이 남북한의 정부의 직접적인 하위 관청이 아니라는 점에서 남한/북한의 행정소송 절차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일종의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은 동 합의서의 문언과 그 취지상 ‘(가칭)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은바, 철원 신남북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과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의 증진과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동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는 남북한 공동 경제특구에 있어서 남북 간의 분쟁에 관해 일종의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제특구가 홍콩과 같이 하나의 자율적인 통치 단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DMZ 이남 지역에 설치될 산업시설에 법인세 또는 기업소득세를 부과할 과세 주체는 남한의 과세당국이 될 것이고, 남한의 과세당국이 몇 퍼센트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것인가는 철원 신남북산업단지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철원 신남북산업단지법」의 조항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DMZ 이북에 위치한 산업시설과 단지 내 근로자들의 유희 등을 위한 위락 시설이 고정사업장으로서 남한 투자자에 의해 DMZ 이북 지역에 투자되어 설치되고, 이에 의해 이윤이 창출될

경우 동 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과세당국이 이에 대해 과세할 것이다. 따라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기존 합의서의 조항들이 의미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남북 상호 교차 투자가 일어날 경우, 단지 내 고정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기업소득세율은 개성공업지구와 같이 「철원 신남북산업단지법」 상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 세율은 양 당국 모두에 관해 최혜국대우라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 4. 원산지표시 관련 검토

개성공업지구와 달리 철원 신남북산업단지 중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DMZ 이남지역의 대한민국 영역에 속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생산된 제품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서 표시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생산된 상품은 미국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게 해당 FTA상의 특혜 관세가 적용되는 상태로 수출될 수 있을 것이다.

## 5.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검토

철원 신남북산업단지의 경우, DMZ 이남지역에만 설치될 산업시설을 위해 생산재가 투입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반출’이 아니라는 의견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철원 신남북산업단지의 DMZ 이남과 이북 간에 별도의 물리적 장벽이 없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DMZ 이남 지역으로의 생산재 투입의 경우에도 철원 신남북산업단지 내에서 DMZ 이북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반출에 준하여 전술한 승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승인권을 가질 경우에는 반출되는 물자의 종류에 제약이 생겨 철원 신남북산업단지의 활성화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철원 신남북산업단지 내에 위 물자들의 유통을 막는 물리적 장벽이 생긴다면, 이는 남북한 합동 경제특구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림 2. 「철원 신남북산업단지」 진전구도